

고용절벽 ... 광주·전남 경제 '벼랑 끝'

대불산단, 지난해 고용 인원 27.5% 1800명 직장 없어
금호타이어 사태 악화·GM 철수... 최악 고용대란 우려
광주·전남 실업률 치솟아 지난달 실업자 8만2000명

광주·전남이 고용 절벽에 내몰렸다. 지난해 영암 대불산단에서 전체 고용인원의 27.5%인 1800명이 직장을 잃었다. 여기에 미국의 통상 압박,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악화가 맞물리면서 최악의 고용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실업자는 3만5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000명(35.9%) 늘었고 지난달(2만3000명)보다 1만2000명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치솟았다. 지난달 광주지역 실업률은 4.5%다. 지난 2016년 2월(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도 같은 기간(3.4%)보다도 1.1% 포인트 상승했다. 또 실

업률의 경우 지난해 12월(2.1%) 이후 1월(3.1%), 2월(4.5%)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비슷해 지난달 실업자는 4만7000명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남의 실업자는 인구 감소에도 지난해 11월(2만명), 12월(2만6000명), 1월(3만명), 2월(4만7000명) 등으로 늘어났다. 전남의 실업자 숫자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다. 그나마 전년도 같은 기간(5만4000명·5.6%)보다는 감소한 게 위안으로 삼을 만하다. 전남 고용률은 지난해 10월(63.6%) 이후 5개월 내리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도 예고

되고 있다. 당장, GM대우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공장 직원(2044명)은 해고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회사 측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군산공장 직원들도 1000명에 이른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한국GM이 국내에서 철수할 경우 한국GM과 협력사의 총 고용 인원 15만6000명(2016년 기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GM이 1만6000여명을, GM의 부품협력사(1.2~3차)가 14만명을 각각 고용했다는 계산자주 추산이다.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는 금호타이어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노사 합의로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상태다. 채권단은 기한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정관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직원은 국내(5038명), 해외(5091명) 등 1만129명으로, 자칫 법정관리로 가게 되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 악화도 불가피해진다.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년 사이에 전체 고용인원의 27.5%가 대불산단을 떠났다.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불산단(외국인투자지역 포함) 고용인원은 4742명으로, 2016년 말(6542명) 대비 27.5%인 1800명이 줄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기도 평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스틸 등 전남지역 철강업체도 비상이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 앞두고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세일가스·송유관 등 강관을 수출하는 휴스틸 대불공장은 생산량을 50% 줄였다. 고용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아 고용 유지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반갑다 봄비" 하얀 목련 활짝
봄을 반기는 비가 내린 15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도로변에 활짝 핀 하얀 목련이 행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MB, 불리한 문건엔 "조작" 측근 진술은 "허위"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만 인정 ... 검찰, 다음 주 초 사법처리 여부 결정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15일 새벽 귀가하기까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수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에 대남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

서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농협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1억여 원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으며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

국회의원 재선거 누가 뛰나
광주 서구갑·영암 무안 신안 ▶6면
정현-페더러 오늘 리턴매치 ▶20면

은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수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된 데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6월 지방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내에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 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의 검토 과정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다음 주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시의회,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 파행

3~4인 아닌 2인 '쪼개기' 정의당·민중당 반발 농성

6·13 지방선거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이 아닌, 2인 선거구로 유지하려는 광주시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 당원들이 '기득권 정당'의 의회 독식 행태'라며 반발하고 15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 광주시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선거구획정위원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정의당과 민중당 일부 당원은 이날 "3~4인 선거구를 늘린 광주시 자치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지난 6개월 동안 연구, 공청회, 관련 단체 의견수렴

을 거친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안을 광주시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려 하는 것은 시의회를 기득권 정당이 독식하겠다는 것이다"며 "과거 4인 선거구 전체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던 그 악몽을 다시 재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광주시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5개월 가까이 속고하고 토론하고 시민 공청회를 통해 결정된 선거구획정 결과물인 만큼, 광주시의회의 심의 결정 과정에서 광주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존중하여서 의결해 주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의를 담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도시와 피부 사이
빈틈없는 시티 선크어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 전국 백화점 및 이모레키오셀러를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s://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